

선거와 정치에 나타난 지역정서의 표출 —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김 형 국*

—〈目 次〉—

I. 머리말

III. 역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정서 표출

II. 핵심개념과 연구방법

IV. 결론과 시사점

I. 머리말

이 글에서 우리 현대정치에 투영된 지역정서의 양상과 정도를 살려보려 한다. 현대정치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도 병용)를 말함인데 우리 현대사에서 1971년의 제7대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 불렸던 간선제로 한동안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1987년, ‘유월혁명’ 덕분에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인식을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다. 국정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민심의 피부적 반응인 점에서 그렇다.

국정은 ‘지정’(地政) 곧 지방정치의 투영이면서 한편으로 지정의 편협을 지양하는 노릇일 터. 우리 현실은 전자가 지역정서의 이름으로 선거 철의 국정을 압도해 왔음을 이 연구는 주목한다. 따라서 민주화시대의 개막을 상징했던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최근 실시된 2002년의 제16대 대통령선거까지 4대에 걸친 대통령 선거가 연구대상이다.

II. 핵심개념과 연구방법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연구의 핵심개념으로 한국판 지역정서에 대한 개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정서 확인을 위한 조사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 연구는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를 받아 이루어 졌음.

1. 지역정서 개관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의 지역정서가 득표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초유의 사건이었다(김형국, 1997). 지역주의(regionalism)라 총칭되는 지역정서의 표출은 정도 고하(高下)는 있을지언정 나라 백성들의 타고난 본성이다. 동물이 그렇듯이 사람도 행태적 특징의 하나로 영토성(territoriality)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Malmberg, 1980). 영토성이 바탕에 깔린 지역주의는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 또는 인격형성기를 보낸 장소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을 일컫는다.

지역주의 또는 지역정서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상황으로 비화될 때는 지역갈등, 지역감정, 지역차별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지역감정이란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여타지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형태” 또는 “지역감정 연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집단적대감”인 것이다(김진국, 1988).

우리의 지역정서 특히 지역감정의 실상은 이렇다(김형국, 1997). 첫째, 남한 땅의 지역감정은 지역적 응집력이 있는 호남, 영남, 기호, 충청지역간에 교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감정의 대명사인 영·호남간 지역감정만이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그러나 지역감정은 전라도를 중심축으로 생겨나고 있음이 또한 우리 현실이다. 충청도 출신(부모도 충청도 출신), 전라도 출신(부모도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부모도 경상도 출신), 서울 출신(부모도 서울 출신), 서울 출신-전라도 부모, 서울 출신-경상도 부모 등 6개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연구(김혜숙, 1988)에 따르면 “전라도 대상에 대해서는 전라응답자와 서울-전라부모 응답자를 제외한 전 응답자가 모두 타 대상에 대해서 보다 덜 좋아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다. 그래서 “흔히 언급되는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이란 전체 중 부분적인 현상만을 지칭할 뿐이며…… 지역감정의 존재양식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라는 측면에서 영호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과 나머지 지역 간의 문제”라는 입론(김진국, 1988)이 설득력을 갖는다.

셋째, 지역편견은 세대간에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혜숙, 1988). “서울-전라부모 응답자들은 서울과 전라대상 둘 다에 대해 다른 대상 지역민 보다 더 선호하였고, 한편 서울-영남부모 응답자들도 영남사람들과 서울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남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보다 일반적인 것이며, 영호남간의 대립적 태도가 2세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한다.

세대간 교육이 지역감정의 악화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도 주목된다. 이를테면 “같은 직장의 동료로 고용하겠다”는 항목에서 전라도(현지거주) 사람은 경상도 사람에 대해 0.81—찬성은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이다—인데 전주어 전라도 부모를 둔 서울출신은 0.68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에 대해 0.48의 태도를 보였고, 경상도 부모를 둔 서울출신은 역시 0.44의 반응을 나타냈다. 세대간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수치들이다.

넷째, 그 내막에서 영·호남간 지역감정의 양상은 상이하다. “전라도 사람의 지역감정은 현

실적인 차별에 근거한 반면 영남사람의 지역감정은 호남사람의 성격 및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다(김진국, 1988).

다섯째, 지역개발의 불균형, 인사정책의 불공정 등의 지역격차는 지역감정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역감정의 결과라 한다. 차별의 속성도 정책적 차별보다는 사회적 차별이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

호남사람들이 경험한 또는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은 거의 보편적인 반면, 인사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소외에서 오는 개인적인 손실이나 불이익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오는 손실이나 불이익에 비하면 간접적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사람이 정책적 차별을 불만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불만의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에 훨씬 용이하기²⁾ 때문이다(김진국, 1988).

지역감정은 삼국시대로 소급되는 역사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상식으로 통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내연(內燃)중인 지역감정은 이 시대의 대표적 사회변화인 지역간 인구이동의 급격성(suddenness)과 과격성(radicalness)에서 연원을 찾는 사회학적 연구(송복, 1988)가 있어 주목된다.

연구는 먼저 개발시책이나 정부 쪽 인재등용의 차별 해소가 한국사회의 지역갈등 완화에 선결과제임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의 지역감정, 지역갈등의 주된 요인이라 보긴 어렵다고 전제한다. 오히려 급속한 인구이동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소론에 따르면 지역간 인구이동의 결과, 이동인구가 새로 삶의 자리를 마련한 행선지역에서 현지사람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사회관계수가 지수상승적으로 증가하지만, 접촉당 사자들 사이 의식의 개방속도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 그 결과, 불신풍조가 만연하면서 인간평가의 집단범주화 현상(group categorization)이 강화되는바 이것이 바로 지역감정이 된다 한다. 지역감정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와 남의 정체를 자기나 다른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지역집단에서 찾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 1) “이 사실을 지지해 주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간접적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 바 그것은 충청도나 강원도 사람들의 정책적 소외에 대한 반응이다. 이들은 ‘무대집’론에 대응해 ‘무대집’론을 전개하며 호남사람의 부당함을 지적하려 하고 이들의 ‘무대집’론 역시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많은 통계자료들이 뒷받침해 준다. 정책적 소외를 받는 두 집단(호남과 충청 및 강원)이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유력한 잠재적 설명은 사회적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충청도나 강원도 사람은 행위자의 위치에 있고 호남사람은 대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김진국, 1988).
- 2) 작가 송기숙 등 광주·전남 각계인사 121명이 발표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바라라는 광주전남인 선언」에서 16대 대선의 노무현 후보 당선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자부하는 상황에 반하여 호남 연고의 정·관계 인사가 ‘참여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다는 불평성 지역 여론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이 대선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호남 홀대’나 ‘호남 소외’ 따위의 억지주장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 여야 정치인들은 호남을 볼모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는 요지였다(『한겨레』, 2003년 5월 15일).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이 전라도 대 여타지역으로 대표되는 것은 “타지역으로 지역이동이 가장 격심한 지역이 전라지역이고, 그 다음이 충청지역이며 경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거꾸로 “경상지역만에 대해서 한결같이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부산과 대구 등의 산업지대에서 지역이동의 물결을 막아 줌으로써 다른 지역민 보다 이동의 급격성과 과격성이 덜 일어났던 데 오로지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부연한다.

지역이동의 급격성과 과격성 때문에 생겨난 인간관계의 불신풍조, 이것이 파급시키는 인간평가의 지역적 범주화에 의해 지역갈등이 고조된다. 그 촉발요인의 대표가 바로 정치인의 정치행위이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지지기반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하여 내집단 구성원에게는 차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외집단 구성원에게는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역설했다.” 지역감정이 정치인들의 전근대적인 행태에 의해 이른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말이다.

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연구의 중요내용으로 ① 대통령 후보별 득표율을 고급통계의 방법을 빌어 국토 상에다 지도화하고, ② 지도에 나타난 여야후보별 득표율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후보의 연고지역별 인구구성비 같은 변수와 연계시켜 그 상관성을 분석하며, ③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국토지정(地政) 상의 함의를 살펴보려 한다.

위의 연구내용가운데 ①을 위해 경향면분석(trend surface analysis)을 실행한다. 통계학적 제도방법인 이 분석방법(Chorley and Haggett, 1965)을 이용하면 후보들의 득표율을 단위장소에 투영해서 지도상에 직선, 변곡선 등의 형태로 등치선(等値線)으로 그릴 수 있다.

분석결과의 도면은 ‘3차 경향면’이 연구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³⁾ 2개의 변곡점을 가진 3차 경향면은 복잡한 사태를 비교적 간명직절하게 표시해 줄 수 있다는 필자의 연구경험에 따라서였다.⁴⁾ 경향면의 경계를 보여주는 등치선의 간격은 후보별 득표율의 편차가 심한 경우는 10% 단위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5% 단위로 조정했다.

기준 단위장소는 13대 대선의 경우는 61개 도시들이다. 등치선 작성의 기준점을 전국 도시로 한정한 것은 전국 도시 지점들만으로도 국토상의 투표양상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14대 대선 이후 16대 대선까지는 전국 시·군을 기준 단위장소로 삼았다. 전산처리 능력의 향상을 감안한 것이다.

연구내용 ②를 위해서는 투표율과 후보자 연고지역 인구변수와 상관성을 회귀분석(step-wise

3) 3차경향면 방정식은 $Z = a + X + Y + XY + X^2 + Y^2 + X^2Y + XY^2 + X^3 + Y^3$ 이다. 여기서 Z는 후보별 득표율, X와 Y는 시·군의 위치를 말해주는 좌표이다.

4) 근대화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혁신이 우리 국토상에서 발생하는 모습을 경향면 분석으로 확인한 바 있다(김형국, 1997: 97-128).

regression analysis)했다. 이는 어느 지방에서 우세한 정당이 있을 경우, 지역적 연고가 지지의 바탕이 되는 ‘파손효과(breakage effect)’의 작용(Rumley, 1981)을 우리 대선에서 검증하려는 노릇이다. 파손효과란 계층요인 등의 사회적 요인은 ‘파손’된 채 지리적 연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서 이름지어진 효과를 말함이다. 그리고 경향면분석이 후보별 장소의 득표율을 파악한 것이라면, 회귀분석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의 투표행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장소와 장소의 사람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지역연구 특유의 접근방법이다. 이는 장소의 발전이 해당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발전과 자동적으로 직결 내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잘 사는 사회계층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변영과 장소의 변영은 다르기 때문에 장소의 발전과 사람의 발전을 나누어서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투표행위도 그렇다. 전라도는 김대중 후보 지지일색인 점에서 전라도 장소의 지지와 전라도 사람의 지지와 거의 일치하지만, 거기서도 타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근소하나마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그만큼 장소의 지지경향과 그 장소 안 사람의 지지경향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회귀분석에 동원된 종속변수는 후보자별 득표율이며, 독립변수는 사례지역에 살고 있는 후보자의 태생 또는 정치기반적 연고지역 출신인구의 백분율 구성비들이다. 독립변수 하나는 연고시기를 출생 때로 소급하는 ‘출생지 인구’ 변수이고, 또 하나는 연고시기가 5년 전으로 소급되는 ‘5년 전 거주지’ 변수이다.⁵⁾

두 독립변수는 회귀분석에서 금기시하는 자동상관성(auto-correlaton)의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5년전 거주지가 출생지이기도 한 경우가 적잖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두 독립변수를 채택한 것은 5년 전 거주지가 출생지가 아닐 가능성도 클 것임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사례지역은 특별 및 직할 4개시와 9개 도 지역이다. 지역별 인구통계는 흔히 ‘인구센서스’라 부르는 『인구조사통계』가 그 출처다. 제13대 대선(1987년)은 1985년 센서스, 14대 대선(1992년)은 1995년 센서스, 그리고 15대 대선(1997년)과 16대 대선(2002년)은 2000년 센서스를 준용했다.

그리고 연구내용 가운데 ③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발전 또는 국가발전을 위한 지정학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정성(定性)적 서술방법(verbal qualitative statement)이 그 방법론이다.

5) 『인구조사통계』의 ‘인구이동통계’는 ‘출생지’, ‘5년 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생지는 “호적에 기재된 출생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말한다. ‘5년 전 거주지’는 “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년 전에 거주하였던 곳”을, 이를테면 1985년 인구센서스에서 말하는 5년 전 거주지는 1980년 11월 1일 이전의 거주지를 말한다.

Ⅲ. 역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정서 표출

1. 13대 대통령 선거

(1) 선거전의 양상

제7대 대선(1971년) 이후 16년 만에 실시된 1987년 12월의 직선제 대통령선거는⁶⁾ 우리사회의 민주 제도 진입을 예고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6월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이른바 '6.29 선언'이 가져다준 결실이었다.

모처럼 갖게된 직선제선거의 열기는 뜨거웠다. 대량생산주의 문화가 팽배한 산업사회답게 서울의 여의도 광장, 보라매 공원, 부산 수영만 등지의 유세장에 '백만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이다.

막상 선거양상은, 민주화가 상징하는 근대화의 의미를 배반한 채, 지역갈등으로 얼룩졌다. 근대화의 심리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합리성을 생활화한다는 점이라 했는데, 합리와는 동떨어진 연고주의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했던 것. 이를테면 노태우 후보의 광주, 전주 등지 유세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경북에서 반DJ 정서가 폭발하고 그 결과, 김대중 후보가 충남·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화당 김종필 후보에게 진 유일한 곳이 되고 말았다.

'1노 3김'의 사파전(四派戰)으로 치뤄진 선거의 결과는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었다. 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 노 후보 당선은 당선자의 승리라기 보다 야권 후보들의 실패 탓이었다는 말이다. 후보별 득표율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각각 33.6%, 28.0%, 27.0%, 8.1%의 순이었다.

(2) 지역정서의 개입

민주투사들로서 군정중식의 기치를 높이 내건 '양김씨'이지만 두 사람은 그만 지역대립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지역갈등이 가열된 끝에 김영삼 후보의 광주 유세는 중단되었고, 김대중 후보의 영남 유세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마침내 선거양상은 여야후보간 대결보다는 '양김' 간 비방전으로 치닫고 말았다.

제13대 대통령선거가 지역감정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전국 유권자 1,961명을 면담한 조사결과⁷⁾ 대통령선거가 타락선거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타락 내용으로 '지역감정 조장'이 많았다. 지역감정 조장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아주 심했다'가 53.7%, '심한 편이다'가 36.0%로 응답자 10명중 9명이 비판적으로 응답한다.

6) 초대만 빼고 2대 때부터 7대 대선까지가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다.

7) 『동아일보』(1988년 1월 22일).

지역감정은 연고지역 후보자에 대한 높은 지지로 구체화되었다. 대통령 후보의 선택기준으로 후보의 출신지역이 투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45.0%,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이 34.1%에 이를 정도로 응답자 5명중 4명(79.1%)이 학력, 성별, 직업 등에 무관하게 후보자 연고지역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했다. 지역감정의 강도를 말해 주는 연고지역 인사에 대한 지지 강도는 전라도 출신 후보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⁸⁾

(3) 대통령후보별 득표율의 경향면분석

경향면분석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노태우 후보의 경우, 전국평균 득표율 35%에 가까운 등치선은 충남의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한 뒤 전남·북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남북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면상의 최고득표 등치선은 경북 안에 자리잡고 있음은 그곳이 바로 당선자의 출신지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후보의 경우는 노태우 후보와 거의 비슷하게 전국평균득표율(27.5%) 이상의 지지지역이 국토 중앙의 남북 축을 기준으로 강원도와 경상도 쪽에 치우쳐 있다. 노 후보와는 달리, 충청도 쪽에서 비껴나 있고 그 지지기반의 핵이 그의 출신지 부산·경남 쪽에 자리잡고 있음이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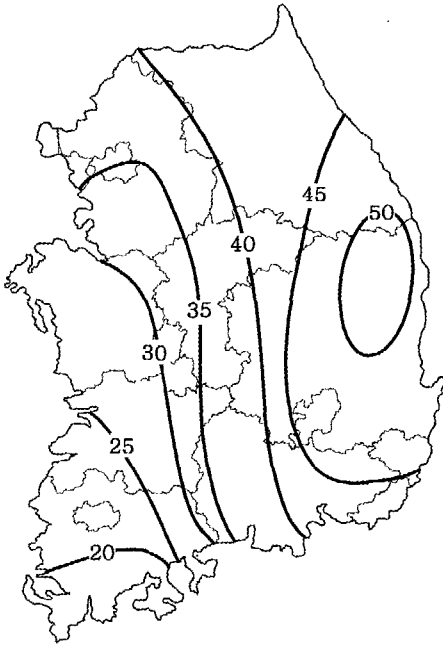
김대중 후보의 경우, 노태우 후보가 전국평균 득표율 이하의 득표를 보인 지역 곧 전남·북과 충남에서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남지역에는 범접하지 못한 채 노태우 후보와 지지지역을 남북 축 기준으로 대치하는 형국이다. 바로 영·호남간 지역감정이 대변하는 갈등의 동서 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김종필 후보의 경우는 경기도 일부, 충남·북 일원이 그의 지지기반이다. 충남 해안 쪽인 지지기반의 핵에서 출발하여 그의 지지축은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유효득표율의 9할을 석권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후보의 지지축이 남북 방향으로 전개된 것에 견준다면 하나의 변이요소로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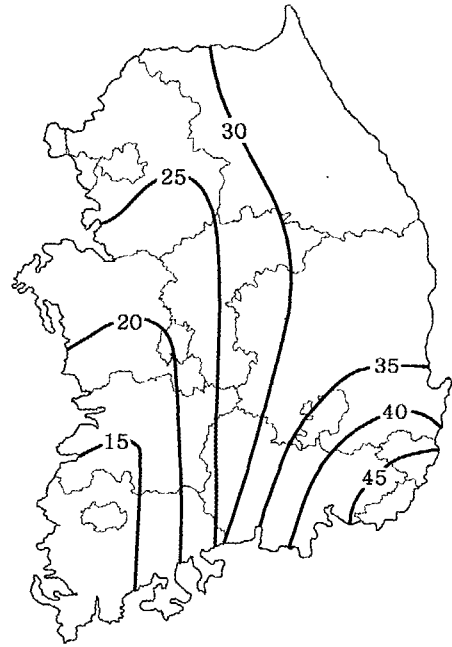
(4) 대통령후보별 회귀분석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율은 연고가 있는 지역의 출신인구 구성비와 밀접히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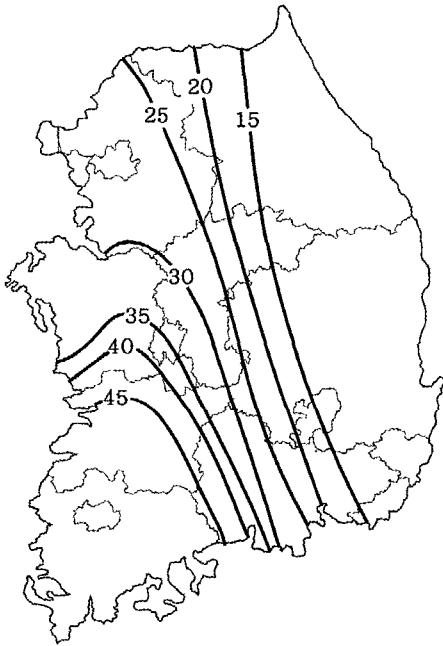
8)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확인된다. 첫째, “귀하는 오늘 투표한 후보를 언제쯤 찍겠다고 결심했습니까?”라는 물음에서 “김대중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은 비교적 일찍 마음을 정해, 초기인 선고공고일 무렵에 이미 61.5%가 결정을 내린 데 비해 같은 시기에 김영삼 후보 지지자는 47.6%, 노태우 후보 지지자는 46.4%밖에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한다. 둘째, 마음 속으로 결정했던 후보와 실제로 투표한 후보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처음 결정한 후보와 ‘같다’고 대답했으며, 14.9%만이 ‘같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유권자들은 대부분 한번 결정한 후보자를 중도에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90.5%가 처음 찍으려 했던 후보와 ‘같다’고 응답한 반면, 김영삼 후보 지지자는 84.9%, 노태우 후보 지지자는 81.0%가 ‘같다’고 답했다. 김대중 후보가 고정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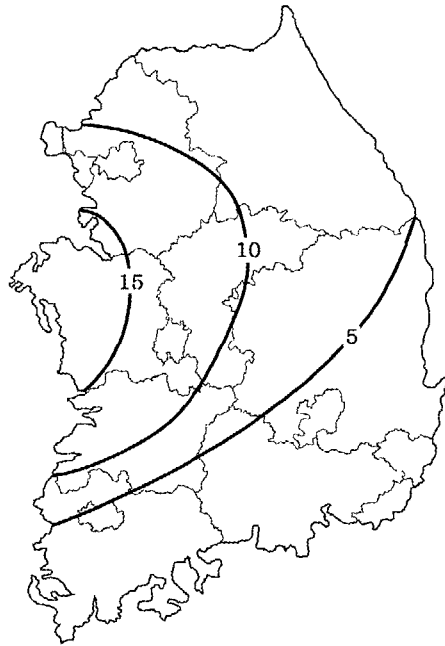
노태우 후보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김종필 후보

그림 1. 13대 대통령 선거(1987)의 후보별 득표율

표 1. 13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과 태생연고지역 인구구성비의 상관관계

후보자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상관도(결정계수: R^2)	적합도
노태우	부상관(-0.36)	상관(0.99)	중위상관(0.64)	0.01
김영삼	상관 (0.28)	상관(0.47)	고상관 (0.75)	0.01
김대중	상관 (0.70)	상관(0.29)	극고상관(0.96)	0.01
김종필	부상관(-0.28)	상관(0.78)	극고상관(0.98)	0.01

관되어 있다. 후보자를 배출한 출신지역 그리고 해당지역과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연고지역을 합한 태생연고지역은 해당지역출신 후보자에게 높은 지지를 보여준다. 후보자별 태생연고지역은 노태우 후보가 대구·경북, 김영삼 후보는 부산·경남, 김대중 후보는 전남·북,⁹⁾ 김종필 후보는 충남이다.

회귀분석의 결과(표 1 참조)는 적합도 검증에서 모두 99%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로 따져본 상관관계의 정도¹⁰⁾에서 노태우 후보는 중위상관(0.64), 김영삼 후보는 고상관(0.75),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후보는 ‘극고상관’ (0.96; 0.98)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3김’이 지역정서의 맹주임이 이 분석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한반도의 허리라 본다면 그 남쪽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짜여진 ‘삼남’ (三南)이라 부르는데 이 말이 틀리지 않아 삼남을 각각 대표하는 3김의 상관도가 노 후보의 ‘중위상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정서가 같은 권역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역별 투표행태가 균질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노태우·김영삼 후보처럼 경상도 문화권에서 남북이 각기 후보를 낸 경우는 같은 지역문화권에서도 지역적 응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산표(散票)현상도 뒤따른다.

그리고 같은 권역에 한 사람의 후보가 나온 경우라도 도색(道色)에 따라 연대감의 기록이 있다. 이를테면 김종필 후보의 연고지를 충남 및 충북이라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충남을 연고지로 상정한 경우(0.97)보다 결정계수가 0.93으로 낮았다. “충남출신 김종필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누른 것은 이 지역(충북)의 호남에 대한 배타성에 힘입은 것이긴 하나, 근소한 차이가 있음은 같은 충청도라 해도 남·북간에는 연대감이 균질적이지 않다”¹¹⁾는 세간의 인식을 방증한다.

9) 선거가 있던 1987년에 이미 광주를 전남에서 독립하여 직할시가 되었지만, 여기서 준거하는 통계자료의 집계시점인 1985년에는 직할시가 아니었기에 광주의 묶은 전남에 포함시켰다.

10) 결정계수 0.2 이하는 ‘미소상관’, 0.2-0.4이면 ‘저상관’, 0.4-0.7이면 ‘중위상관’, 0.7-0.9이면 ‘고상관’, 그리고 0.9-1.0이면 ‘극고상관’이다(김광웅, 『조사방법론』, 박영사, 1976).

11) 『조선일보』(1987년 12월 19일).

1. 제14대 대통령선거

(1) 선거전의 양상

14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당일 까지 여느 선거처럼 술한 정치적 논란과 쟁점들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1990년에 민정·민주·신민주공화당의 3당 통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에 대해 ‘권력야합’과 ‘정통성 결여’라는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한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신당 창당설 그리고 선거전에 정주영 국민당 진영의 현대그룹 동원 양상을 둘러싸고 재벌정치에 대한 공방이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되었다. 이전에 대선 때마다 선거쟁점이 되었던 ‘군사독재’, ‘장기집권’, ‘민주화’ 등에 대한 논란은 크게 약화된 반면, ‘재벌정치’, ‘금권선거’ 같은 새로운 이슈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관권개입의 논란도 빠질 수 없었다.¹²⁾ 투표일 직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부산기관장 모임과 이에 대한 국민당의 폭로로 야기된 이른바 ‘부산 복국집사건’은 선거과정에 대한 관권개입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런 의혹은 거꾸로 부산·경남지역에다 반(反)호남정서를 더욱 부추기는 반전(反轉)효과를 낳았다.

선거가 반칙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와중에도 정치적 발전이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3당 통합에 대한 비판의 정치적 응수인양 1992년 5월에 집권당 최초로 민자당은 서구정치의 민주방식을 본받아 대통령후보 자유경선을 실시한다.¹³⁾

제14대 대통령선거는 41.4%의 지지를 얻은 김영삼 후보가 33.4%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대중 후보를 2백만 표 차로 따돌리며 낙승한다. 32년 만에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한 것이다.¹⁴⁾ 정주영 후보는 16.1%의 득표율에 그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14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특히 13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달랐다. 첫

12) 당시 연기군수가 14대 총선과정에 자행되던 관권선거의 기미를 폭로함으로써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 탈당했고 선거관리용 중립내각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13) 이 과정에서 이종찬 후보가 경선에 불복종하고 새한국당을 창당하지만 선거에 임박하여 경선 후보를 사퇴하고 국민당에 입당하였다. 다수의 민자당 내 반(反)김영삼 세력들도 국민당에 동반 입당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다.

14) 3당 통합을 거쳐 출범한 문민정부의 전말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하나는 이렇다.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던 민주투사가 하루아침에 역대 군사세력과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주화 투쟁을 하며 온갖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컸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그것을 투표로 심판하지 않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3당 합당의 아들’임을 부인하려 했고, 군사세력과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과거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했다. 그는 과거 정권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개혁과 사정, 역사 바로 세우기 등에서 조급함과 과욕과 무리가 따랐던 것은 그의 성격 탓도 있지만, 합당 콤플렉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장명수 칼럼: 이인제의 난과 세대교체”, 『한국일보』, 1997년 9월 24일).

째, 군 출신 후보자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문민정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단초였다. 둘째, 민주화 투쟁을 해 온 ‘양김씨’(YS, DJ)의 재대결이란 점에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희석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재벌정당이 만들어지고 재벌이 후보로 나섰다는 점.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가 그 장본인이다. 넷째, 13대 때의 경상·전라·충청도 3 권역 갈등구도와는 달리 충청권이 배제되고 대신 강원권 연고의 후보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2) 지역정서의 개입

14대 대선은 양김씨에 강원도 연고의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가세한 3파전이었다. 무엇보다 양김씨가 영·호남 대각(對角)을 대표하고 있어 지역갈등은 적나라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결과는 호남지역에서 김대중 후보가 90% 이상의 지지를 누렸지만 김영삼 후보도 영남권에서 68%나 획득해서 절대수에서 후자의 호남권 열세를 만회하고도 남았다. 투표인구의 지역적 열세를 안고 있는 김대중 후보가 산업발전의 요람인 영남에서 재벌 정주영 후보가 선전해서 김영삼 후보의 지지세를 잠식해 주기를 고대했지만 후자의 지지기반인 강원도에서조차 김영삼 후보에게 8%나 뒤지고 말아 투표인구의 영남강세, 호남 약세의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

(3) 후보별 득표율의 경향면분석

전국평균득표율(41.4%)을 상회하는 김영삼 후보의 강세 지지기반이 국토중앙의 남북축 오른쪽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그의 승기(勝機)는 수도권 일대에서도 평균득표율에 육박하는 40%의 경향면에 있음을 도면상에서 간파할 수 있다. 김영삼 후보의 약세지역은 단연 전라도 쪽이다.

김대중 후보의 패인은, 수도권에서 김영삼 후보가 40% 대의 지지를 누린데 견주어, 30%대의 지지를 확보에 그친 데 있다(그림 2 참조). 13대 대선 때도 그랬지만 김 후보의 절대 약세지역은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어지는 국토의 남북관통선 오른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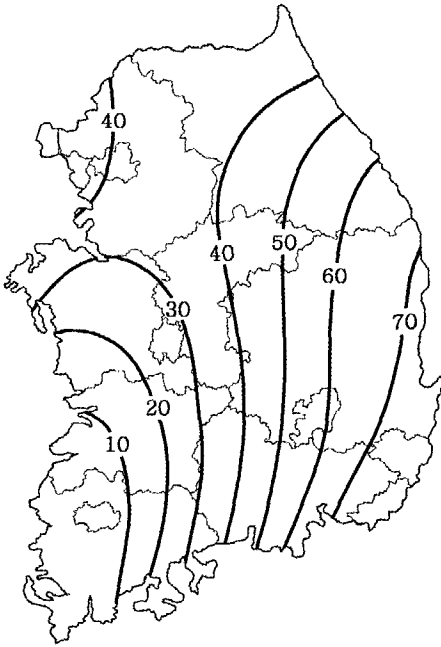
정주영 후보의 강세지역은 그의 출생 연고지인 강원도이다. 여기서 출발하여 전남 쪽을 향해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급격히 지지가 줄고 있다. 13대 대선 때 김종필 후보가 충남 바닷가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지지기반이 약화되던 형국을 연상시킨다.

(4) 후보별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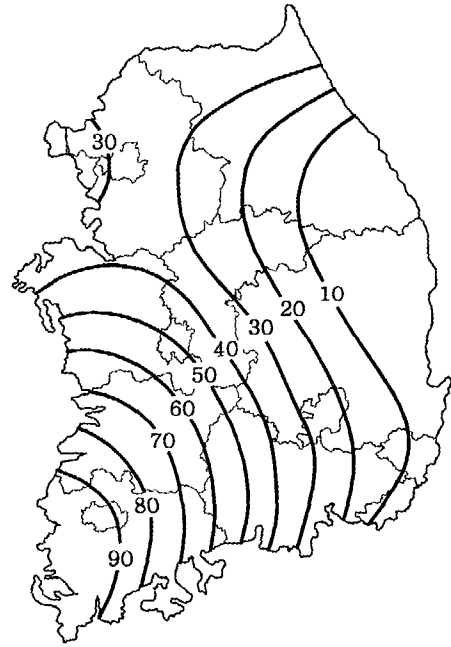
역대로 대통령후보자들의 지지기반은 태생연고지역이다. 태생연고지역으로 말하자면 김영삼 후보는 부산·경남지역, 김대중 후보는 광주·전라지역, 정주영 후보는 강원도, 그리고 박찬종 후보¹⁵⁾ 역시 김영삼 후보의 텃밭과 같은 부산·경남지역이라 할 수 있다.

득표율과 태생연고지역 인구구성비와의 상관관계에서 결정계수(R^2)를 통해 살펴본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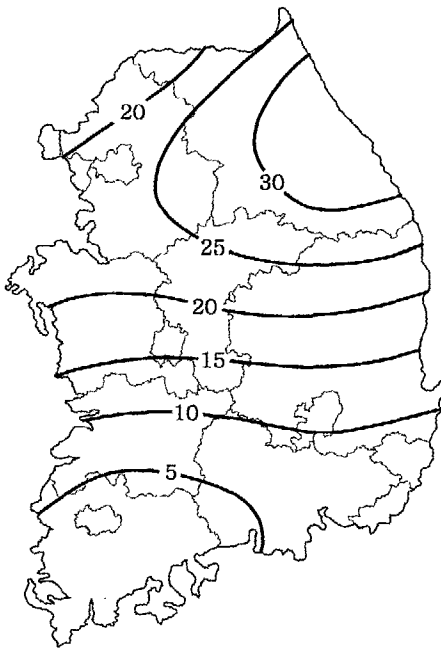
15)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이외에 4인의 군소 후보 가운데 득표율 으뜸은 6.4%의 신정당 박찬종 후보였다.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정주영 후보

그림 2. 14대 대통령 선거(1992)의 후보별 득표율

표 2. 후보자별 득표율과 태생연고지역 인구구성비의 상관관계

후보자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상관도(결정계수: R^2)	적합도
김영삼	상관(0.01)	상관(0.63)	중위상관(0.44)	0.03
김대중	상관(0.55)	상관(0.34)	극고상관(0.94)	0.00
정주영	부상관(-1.99)	상관(3.75)	중위상관(0.44)	0.03

(표 2 참조)은 단연 김대중 후보가 0.94로 가장 높고, 김영삼 후보와 정주영 후보는 다같이 0.44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듯 김대중 후보는 여전히 연고지역의 지역주의적 특성에 강한 지지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당 정주영 후보 역시 유세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 배출한 대통령후보자임을 상기시키면서 ‘강원도 대통령’, ‘강원도의 자존심’을 외친 것이 주요했음인지 영·호남 지역감정에 더해 또 다른 모습의 지역감정을 부추겼다.¹⁶⁾

14대 대선의 특기사항은 후보자의 연고지역 구도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후보자를 배출한 반면에 13대 대통령선거 때 대선 후보자를 배출했던 대구·경북지역과 충청지역이 후보를 배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사실이 주목의 대상이다. 이 지역은 ‘TK’라 이름할 정도로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정치권력의 으뜸 배출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치성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궁금하지만 그 방향은 이미 예고된 바이기도 하다.

우리의 정치성향이 어떤 후보 내지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어떤 후보 내지 정당을 기피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기억한다면 영·호남 지역대립구도 속에서 대구·경북은 ‘반(反)DJ’ 정서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곳인 만치 전자의 최대 정치라이벌인 DJ에 대한 거부감은 진작 뿌리깊었다. 반DJ의 정서는 자연히 경남출신 후보에 대한 반사적 지지로 이어지기 마련이라 김영삼 후보에겐 태생연고지역 부산·경남에 대구·경북이 지지기반으로 가세한다. 이 점은 김영삼 후보의 지지기반을 부산·경남으로 한정했을 때보다 대구·경북을 추가했을 경우의 상관성(결정계수: 0.67)¹⁷⁾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6.4% 득표율을 기록한 신정당 박찬중 후보와 여당 출신 김영삼 후보의 태생연고지의 중첩에¹⁸⁾ 따른 지지지역 잠식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낙승은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를 파점(寡占)한 결과다.

16) 『조선일보』(1992년 12월 1일).

17) 김영삼후보의 경우, 정치연고지 출신인구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밝힌 회귀방정식의 적합도는 0.001으로 나타난다.

18) 지지기반이 김영삼 후보와 중첩됨을 염려한 박찬중 후보는 “지역갈등은 독재정권의 통치술의 산물이며,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는 지역감정,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영·호남인들을 불모로 반사이익을 노리고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992년 11월 7일)

3. 15대 대통령 선거

(1) 선거전의 양상

15대 대통령선거도 격렬한 정치적 쟁점이 꼬리를 물었다. 먼저 여당의 대선 주자인 이회창 후보에게 선거 막판까지 정치적 부담으로 안겨준 아들 병역문제의 공방이 있었다.

1997년 7월 21일에 실시된 신한국당 후보경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50% 대의 지지를 얻었던 이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시비에 휘말린 끝에 상대적 강점이라던 ‘대쪽’ 이미지와 ‘도덕성’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그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한 것은 당연했다. 이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였던 이인제 후보가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하면서 거대 여권이 분열하는 사태를 맞는다.

반면, 야권은 원내 제1야당과 제2야당을 이끄는 DJ와 JP가 제휴하여¹⁹⁾ 이른바 ‘DJP연대’를 이루어내어 김대중 후보의 지지기반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인제 후보의 독자출마에 따른 여권 분열로 ‘조직’과 자금동원 등 전통적으로 여당이 누리던 이점의 상실은 상대적으로 야권 단일의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고질적인 인신 비방과 흑색선전은 계속된다. 이를테면 1997년 10월 25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인제 후보(28.8%)가 김대중 후보(38.2%)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아들 병역시비에 휘말린 이회창 후보(19.1%)가 맨 뒤로 밀려나자, 11월 4일 한나라당 측은 청와대의 이인제 후보 200억원 지원설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이인제 후보의 지지도는 급락한다. 나중에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은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이미 반사이익이 이회창 후보를 향하고 있어 선거판은 김대중-이회창 양자구도로 굳어지고 만다.²⁰⁾

이처럼 선거과정 내내 후보자 개인의 신상문제를 비롯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의 가열로 말미암아 후보자들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겨를이 없었다. 진정한 정책대결 보다는 정적(政敵)에 대한 공격을 통해 지지를 획득하려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negative strategy)이 지배했던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등장한 IMF사태는 국가파산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경제위기감이 팽배하면서 초미의 선거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는 여권의 공동책임론과 정권교체론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되풀이되는 선거과정의 정치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선보인 이색 국면은 ‘미디어 선거’였다는 사실이다.²¹⁾ 후보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정견을 직접 발표하는 방

19) 14대 대선 때의 여당 쪽 3당합당처럼 DJP 공조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치의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집권만을 위해 공조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다.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데 넘어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한겨레』, 1997년 7월 25일).

20) 15대 대선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그리고 군소 정당 후보 4인을 포함해서 총 7인이 출마했다.

식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개인적 자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미디어 선거가 대규모의 조직선거와 돈 선거의 위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의 실마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15대 대선은 군중을 동원하는 대형 유세가 사라지고 TV토론 및 광고 등이 주로 선거전략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존선거에 비해 금권 및 관권 시비 그리고 선거사범이 현저히 줄어들었다.²²⁾

15대 대선의 투표율(80.6%)은 14대 대선(81.9%)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²³⁾ 하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 투표율이 낮아진다”라는 일반 통설을 기억할 때 결코 낮은 투표율은 아니었다.²⁴⁾

투표결과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었다. 네 번 도전 끝에 40.3% 득표로 마침내 거머쥔 대권이었다. 이회창, 이인제 후보는 각각 38.3%, 1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 지역정서의 개입

선거도중에 역시 지역감정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한다. 신한국당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후보의 변은 “3김 중심의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와 세대교체”이었다. 지역감정 척결의 선봉장이 될 것을 자임한 것이다.

명분은 모두가 지역감정을 염려하지만 내막에서는 지역감정이 지지기반 확보의 가장 확실한 근거임을 선거전략팀이 모를 리 없다. 경남지방 유세에서 경북 출신 중진 정치인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는데 이어, 김대중 후보와의 근소한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자 투표일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이회창 후보측은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는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시키는 지역감정 자극의 전략을 사용한다.

김대중 후보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14대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그가 1995년에 다시 대선 준비의 일환인 듯 ‘지역등권(等權)론’을 주장하고 나선다.²⁵⁾ 지역감정을 움직일 수 없는 정치현실로 수용하자는 주장²⁶⁾으로서 그 본질은 지역대립을 가장 확실한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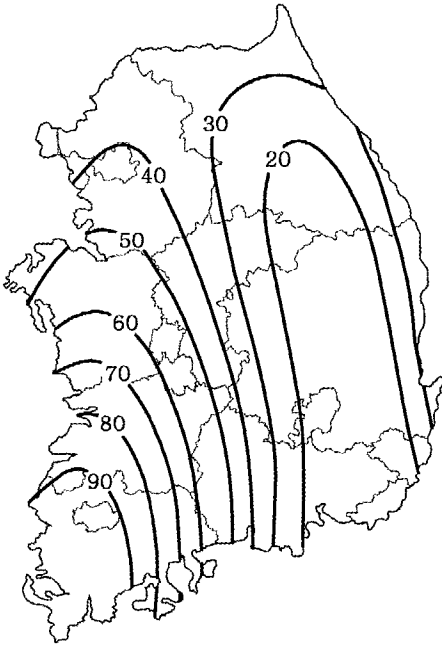
21) 한 일간지는 “1997년 한국의 권력은 총구가 아닌 미디어에서 나왔다”고 표현했다(『조선일보』, 1997년 12월 21일). 하지만 방송광고 및 신문광고가 고비용인 탓에 고비용정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15대 대선의 선거당일 까지 2백3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16명을 구속했다 한다. 14대 대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 1,878명(구속 137명)의 12.3%에 불과한 숫자다(『중앙일보』, 1997년 1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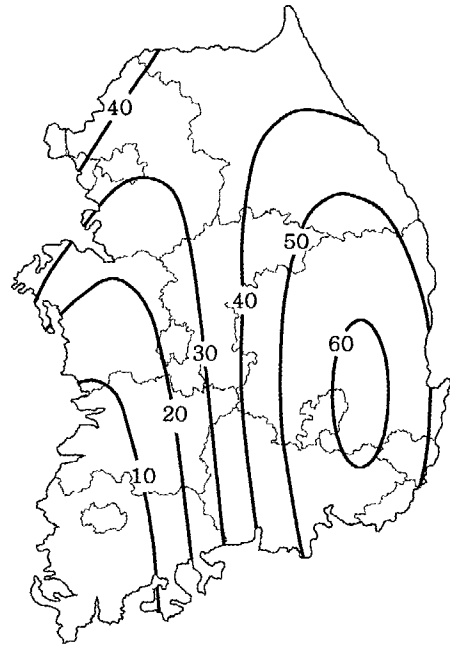
23) 득표율은 김대중 후보가 40.3%, 이회창 후보는 38.7%, 이인제 후보가 19.2%였다.

24) 국가경제 파탄의 위기감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재협상 논란 등을 둘러싼 후보자들간 치열한 공방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동아일보』, 1997년 12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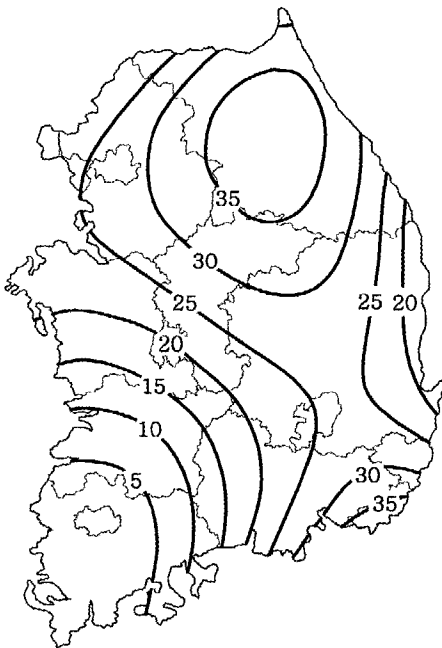
25) “... 정치인들이란 결국 어떤 목적인가를 위해 ‘그럴 듯한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 ‘지역등권론’이란 새 말을 쓰기 시작한 것도 ... 겉으로 명분상으로는 그것을 배척해 왔는데, ... ‘지역주의의 실체성’을 내걸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역주의를 개탄하고 만류해야 함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비록 정직한 ‘리얼리즘’일 수는 있어도 가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조선일보』 사설, 1995년 5월 31일).



김대중 후보



이회창 후보



이인제 후보

그림 3. 15대 대통령 선거(1997)의 후보별 득표율

기반으로 파악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연고지도 이에 적극 화답했다. 지역별 투표율에서 광주가 89.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남(87.3%)과 전북(85.5%)이 높았다.²⁷⁾ 전국적으로 14대 때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은 오히려 투표율이 각각 0.4%, 0.9%로 높았던 것이다.²⁸⁾

(3) 후보별 경향면분석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당선은 전국평균득표율 40.3%에 해당하는 40% 경향면이 서울을 안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40% 기준선으로 말하자면 14대 선거에서 지지기반이 충청권까지 확장되었을 뿐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했음과 대비된다(그림 3 참조).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그의 실제 득표율 38.3%를 상회해서 40% 대에 도달했다라면 상황이 반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40% 경향면은 강원도와 경상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전국득표율이 19.2%에 그친 이인제 후보 지지기반의 핵은 강원도 중앙부 그리고 부산 일원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는 이 후보가 경선에 승복하여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이회창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이 강원도와 부산 일원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인제 후보의 대선 출마가 김대중 당선자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었음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회창 후보의 패퇴는 절대적으로 신한국당을 탈당, 새로 당을 만들어 출마한 이인제 후보와 지지기반이 일부 중복됨에 따른 역풍 탓이었다. 야당 후보 한 사람을 상대로 두 사람의 여당쪽 후보가 나왔다는 사실은 게임이론상 백전백패라 할 것이다.²⁹⁾ 이회창과 이인제

26)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퇴한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15대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이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지역감정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정권 쟁탈전 속에서 생겼다. 대통령은 우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누구든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지역감정이 해소된다. ...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감정이나 인재 등용의 형평성보다 호남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동아일보』, 1997년 7월 28일).

27) 그 뒤는 울산(81.1%), 경기(80.6%), 서울(80.5%), 경남(80.3%) 순이었다. 영남권인 대구는 76.9%의 투표율로 제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경북 역시 78.5%로 투표율 9위에 그쳤다. 해당 지역 출신의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77.0%이었다.

28) 특히 광주지역의 투표율은 투표 당일 오후 1시까지만 해도 47.6%로 지역별 투표율에서 11위에 불과했으나 오후에 접어들면서 투표율이 급증하여 마지막에 투표율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광주 지역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경계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늦게 하자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중앙일보』, 1997년 12월 19일).

29) 이인제 후보의 경선 불복, 대선 출마를 일컬어 조선시대의 이인좌의 난을 필시 상기시키는 뜻으로 “이인제의 난”이라 이름했다(장명수 칼럼, “이인제의 난”과 세대교체”, 『한국일보』, 1997년 9월 24일). “...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던 그가 난을 일으킨 원인은 이회창 후보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가 내세운 명분은 “3김 중심의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와 세대교체다.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의 병역 의혹으로 고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역 면제가 불법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회창 후보나 그 가족이 명백한 불법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반란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가 내세운 세대교체론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해도 반란을 기반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그의

표 3-1. 15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과 태생연고지역 인구구성비의 상관관계

후보자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상관도(결정계수: R^2)	적합도
김대중	상관(0.64)	상관 (0.21)	고상관 (0.86)	0.00
이회창	상관(0.07)	부상관(-0.47)	미소상관(0.05)	0.70
이인제	상관(0.12)	부상관(-0.04)	미소상관(0.05)	0.73

표 3-2. 15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과 정치연고지역 인구구성비의 상관관계

후보자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상관도(결정계수: R^2)	적합도
김대중	상관(0.17)	상관(0.71)	고상관 (0.75)	0.00
이회창	상관(0.30)	상관(0.18)	중위상관(0.67)	0.00
이인제	상관(0.06)	상관(0.12)	미소상관(0.19)	0.26

두 후보는 태생연고지역이 다같이 충청권인데다 한나라당의 지지가반이라 할 수 있는 경남권이 이인제 후보에 의해 적잖이 잠식되었다.

(4) 후보별 회귀분석

15대 대선 후보별 태생연고지는 김대중 후보는 광주와 전남·북, 이회창 후보는 충남, 이인제 후보 역시 충남이다. 태생연고지의 시도별 인구비중을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우선 김대중 당선자의 득표율은 태생연고지역 변수와의 상관성(0.86)이 높다. 반면 이회창 후보에 대한 태생연고지역 대전·충남의 지지도는 회귀방정식의 부적합성은 말할 것 없고 미미한 상관성(0.05)이 말해주듯이 지극히 미미하다. 이는 충청권이 한국현대정치외 부도옹(不倒翁)인 JP에 의해 오래 전에 선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³⁰⁾ 이 점에서는 충청권 태생 이인제 후보 역시 이회창 후보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

한편, 15대 대선은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권력배출의 대표 근원지였던 경상도 출생연고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음이 이변이었다. 이 때문인지 여느 선거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15대 대선은 태생(胎生)연고지가 무색

세대교체론은 신한국당 대의원들의 선택에서 일단 뒤로 밀렸던 것인데,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겨우 시작된 후보경선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후보의 인기가 떨어졌으니 판을 새로 짜자는 주장이라면,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30) 이인제후보가 '3김 청산'으로 지역할거구도를 없애겠다고 공언하자 충청권의 맹주임을 자부하는 JP는 '햇바지론'을 내세워 충청권의 반감을 유발한다. “심심하면 '3김(金) 청산' 하는데 싫건 좋건 상관없이 이번에 한 김(金)의 대리인(신한국당 李대표)과 2(金)이 나와 마지막 결판을 벌일 겁니다”(『중앙일보』, 1997년 7월 26일).

해진 대신, 정치연고지가 유권자 투표성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만큼 상황설명에 유효한 새로운 변수를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음 아닌 ‘정치연고지’가 그것이다.

정치연고지로 말하자면 우선 김대중 후보는 DJ연대의 영향으로 충청도 지역의 지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³¹⁾ 따라서 김대중 후보의 정치연고지역은 광주와 전남·북에 더해 대전과 충남·북을 합친 곳으로 확대된다.

이회창 후보의 정치연고지는 단연 전통적으로 여권 후보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반DJ 정서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이다.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듯이, 이회창 후보의 지지기반으로 등장한다.³²⁾ 강원 지역 역시 이 후보와 연대한 조순 후보의 연고지 영향으로 이 후보의 정치연고지에 합류한다.³³⁾

이인제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라는 소문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부산·경남의 후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관측이었다. 이회창 후보와 김영삼 대통령 사이 여당 쪽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관측은 사실인양 강화된다. 이 때문에 김영삼 후보의 오랜 텃밭 부산과 경남지역의 성향이 애매해진다. 한편, 대구·경북과 더불어 영남권인 부산·경남 또한 반DJ적 성향이라 이회창 후보에 찍 호의적이라는 전망도 그럴싸했다.

투표결과를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인제 후보보다 비록 높았지만, 부산·경남의 전자 지지율은 대구·경북을 따르지 못했다. 대구·경북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율은 71.7%로 높았던데 반해, 부산 경남의 지지율은 52.6%에 머문다. 이 연장으로 대구·경북의 이인제 후보 지지율은 12.9%인데 반해 부산·경남의 지지율은 배가 훨씬 넘는 29.4%에 이르고 있다.

태생연고지 대신 정치연고지를 독립변수로 잡은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방정식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연고지역 변수가 김대중 당선자의 득표율에 끼친 상관성(0.75)은 태생연고지역 변수 대비 상관성(0.86)보다 낮다. DJP 연합이 노린 충청권 지지가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충청권에서 이회창 후보보다 상당수준 높은 득표에 그쳤을 뿐 그가 전라도에서 얻었던 ‘절대 지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충청권이 전라

31) 김 후보의 이 연대의 영향으로 충남 예산과 논산이 각각 출생지인 이회창, 이인제 후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지역에서 종다수(從多數) 득표에 실패한다.

32) 신한국당에서 우리 정치판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음을 지역감정 해소의 계기로 보고 싶다는 희망성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신한국당이) 경상도 출신을 후보로 뽑지 않은 것은 큰 변화이다. … 영남 유권자들은 이제 대통령 선택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느낌’을 따라 하던 투표를 ‘생각’을 따라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은 지역감정의 좋은 먹이가 되지만, 생각은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느껴야 할 곳에서는 생각하면서도, 정작 생각해야 할 곳에서는 느낌으로 끝나는 잘못에 빠진다. 투표소야말로 느껴야 할 곳이 아니라 생각해야 할 곳이다. … 지역감정은 서로 의지하면서 강화된다. 이것이 영남에서 무너지면, 호남이나 충청도에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성한표, “우리는 남이다”, 『한겨레』, 1997년 8월 13일).

33) 신한국당은 1997년 11월 21일, 3김 청산, 정치혁신,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내걸고 조순 후보의 민주당과 통합하여 한나라당으로 탈바꿈한다.

권과 문화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 충청권 안에서도 그의 태생 도가 아닌 충북 쪽에서 해묵은 정치인 JP에 대한 식상감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³⁴⁾ 얼마큼은 작용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는 태생연고지보다 단연 정치연고지의 후원에서 연유한다. 태생연고지역과의 상관성(0.05)은 지극히 미미했던데 반해 정치연고지역(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과의 상관성은 0.67로 대폭 상승한다. 물론 회귀식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⁵⁾

경남권의 이인제후보 지지경향은 김영삼 대통령이 은연중에 후원한다는 세간 소문이 영향을 미쳤음인지 경남권이란 정치연고지역과의 상관성은 0.19로 태생연고지역 대전·충남과의 상관성(0.05)보다 꽤 높다. 하지만 회귀방정식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까닭에 단정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16대 대통령선거

(1) 선거전의 양상

2002년의 16대 대선 초반은 후보선출과정이 주목을 끌었다. 정당별로 후보 경선대회를 개최하는데, 한나라당은 15대 대선에 나섰던 이회창 후보가 여세를 몰아 진작 독주체제를 갖추었지만 새천년민주당은 이번이 발생했다.

민주당 경선대회에서 노무현 후보가 특히 전라도지방에서 해당 지역출신인 ‘작은 DJ’ 한화갑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이벤트를 연출한다. 게다가 15대 대통령선거전에서 신한국당 후보경선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선에 출마하여 이회창 후보의 잠재적 지지표를 잠식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는 공론에 따라 차기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점쳐지던 이인제 경선후보마저 제치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경남출신이 전라도지역이 지지기반인 민주당의 후보로 뽑혔음도 예사롭지 않은 사태전개였다. 영·호남간 지역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라는 평가를 받을 만도 했다.

초반에 양자 대결전으로 전개되던 선거전은 정몽준 후보의 경선 참여로 한동안 혼미양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투표전날 정 후보의 전격 후보사퇴로 결국 선거전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각축전이 되었다.

16대 대선의 투표율은 70.8%이었다. 직접선거로 치러진 10차례 대통령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특히 1997년 15대 대선 때의 80.7%, 그리고 1971년 7대 대선의 79.8%보다도 낮았다.

34) 충청권에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은 대전 44.4%, 충남 47.2%, 충북 36.7%인데 반해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28.5%, 23.0%, 30.2%이다. 양 후보간의 차이는 대전·충남에서 심하고 충북에서는 경미하다.

35) 참고로 이회창 후보의 정치연고지를 대구·경북과 강원도로 한정했을 경우의 상관성은 0.43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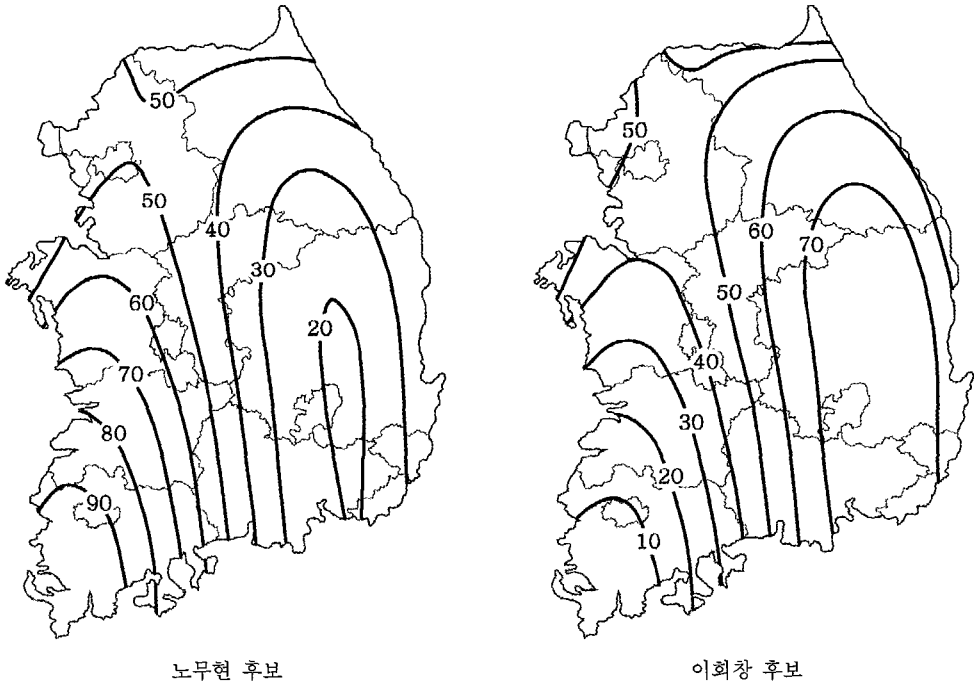


그림 4. 16대 대통령 선거(2002)의 후보별 득표율

(2) 지역정서의 개입

16대 대선의 선거과정은 표면상 지역정서의 완화 쪽으로 작동했다. 전라도가 정치기반의 요새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남 출신 노무현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16대 총선에서도 지역갈등 해소의 선봉장임을 앞세워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지극히 미약한 부산에서 출마했다. 비록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명분론이 인정을 받아 ‘국민의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기용되었던 것이다.

개표결과는 48.5%의 득표율을 누린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었다. 46.2%의 득표율에 그친 이회창 후보는 민주당후보에게 두 차례 연패 당하는 불운의 주인공이 된다.

(3) 후보별 경향면분석

후보의 지역별 득표를 먼저 경향면분석(그림 4 참조)에 따르면 노 후보의 지지지역은 15대 대선 때의 김대중 후보 지지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민주당의 재집권이란 점이 지지표의 지역분포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전국평균 득표율 48.5%를 약간 상회하는 50%의 득표 경향면이 서울을 일부 끼고 수도권권을 감싼 뒤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로 나아가면서 지지표가 급상승한다.

이회창 후보의 우세지역은 노무현 후보의 열세지역과 일치한다. 두 후보 득표율의 경향면이

표 4-1. 16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과 출생연고지역 인구구성비의 상관관계

후보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상관도(결정계수: R^2)	적합도
노무현	부상관(-0.36)	부상관(-0.05)	저상관 (0.20)	0.24
이회창	상관 (0.25)	부상관(-0.59)	미소상관(0.02)	0.86

표 4-2. 16대 대선 후보별 득표율과 정치연고지역 인구구성비의 상관관계

후보	출생지	5년전 거주지	상관도(결정계수: R^2)	적합도
노무현	상관(0.53)	상관 (0.15)	고상관 (0.81)	0.00
이회창	상관(0.82)	부상관(-0.37)	중위상관(0.62)	0.00

모양은 거의 같고 다만 높고 낮은 숫자만 완전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두 후보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 40%에서 50%의 득표율 보이고 있음은 이 일대에서 양자간의 접전이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이 후보의 절대우세지역은 경남·북에 길게 펼쳐져 있는 바, 이는 15대 대선 때의 절대우세지역이 경남·북에 좁게 펼쳐져 있었음과 대조된다.

(4) 후보별 회귀분석

지역별 지지경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출생연고지역보다 단연 정치연고지역이 후보의 득표율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김대중 당선자는 출생연고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데 반해 이회창 후보는 정치연고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받았던 15대 대선에 견주어, 16대 대선은 두 유력 후보가 다 같이 정치연고지역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득표율 대 출생연고지역 상관관계에서 노무현후보, 이회창 후보는 각각 0.20과 0.02의 결정계수를 나타냈음(표 4-1 참조)에 견주어, 득표율 대 정치연고지역 상관관계는 0.81과 0.62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음(표 4-2 참조)에서 확인된다. 상관도 이전에 득표율 대 출생연고지역과의 회귀방정식이 적합도에서 기각되는데 반해, 대 정치연고지역과의 회귀방정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후보지지도에서 첫째, 호남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90%를 상회하는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호남표가 응집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반DJ의 선봉에 섰던 이회창씨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³⁶⁾이라 한다.

전라도의 노무현 절대 지지는 “후세인의 이라크에서나 가능한 일”이란 지적을 받았다.³⁷⁾ 하

36) “한나라당의 전략은 반(反)김대중이었다. ...지역감정에 기반 선거전략이었다. 영·호남의 인구수 차 이만큼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한겨레』, 2002년 12월 31일).

37) 선호 후보에 대한 지역적 전폭 지지는 영남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영남에서 타향사람 빼고 투표해 보라. 한나라당에 90% 이상 나온다. 비율은 95% 대 72%지만 유권자 숫자로 계산해보면, 영남에서 이 후보가 697만 표, 호남에서 노 후보가 374만 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영남이 더 ‘몰아주기’를 한 것”이 그걸 말해준다(『조선일보』, 2002년 12월 24일).

지만 다른 평가도 나왔다. 호남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9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을 모두 지역주의의 결과로 해석하기 힘든 것이, 40대 이상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호남의 20-30대가 노무현 후보를 절대 지지한 것은 그가 ‘지역통합’을 이뤄낼 인물인데다 개혁성향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 한다. 한마디로 지역감정은 여전하지만, 젊은 층에선 분명 약화·동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³⁸⁾

실제로 전라지역의 민주당 후보지지는 표면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대선과는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2000년대 후반의 한국정치를 주도하던 3김이 퇴장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되지 못한 마지막 1김은 스스로 후보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악하고 있는 소수 정당은 후보마저 배출하지 못했다. 이 점에서 앞으로 3김과 같은 지역적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지역주의도 세대·계층·정책 등 다른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이 관측의 상황적 근거는 “지역감정은 영남 사람과 호남사람의 피 속에 각인돼 있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이후 정치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데 사용한 것이어서 이들의 퇴장과 함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구체적 근거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투표행태에서 지역주의 해소의 실마리가 읽혀지고, 영남의 20-30대 사이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당선자의 지역별 지지획득에서 충청권에서 우세한 것도 특이사항의 하나였다. 무엇보다 투표일에 임박하여 충청도를 텃밭으로 삼는 자민련의 이인제 총재권한대행이 한나라당의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는 대전과 충남·북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득표하여 45% 안팎을 얻은 이 후보를 눌렀다. 노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이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파고드는데 주효했던 것이다.³⁹⁾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반작용으로 수도를 잃게 될 서울과 수도권에 표 잃기로 이어져 이회창 후보의 득세가 예상될 법했지만 역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노 후보가 득세한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적극론으로 지역감정보다 지역공약이 앞으로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후보들도 지역방송사 TV토론을 거치면서 지방 분권 문제에 지역에 대한 공약을 중요시하게 된” 까닭이라 한다. 또 하나는 소극론으로 “(행정수도 관련) 다만 서울을 얻는 충청권은 표가 되고 서울을 잃을 수도권에서는 표가 되지 않은 것은 인구와 환경에 대한 식상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풀이다.⁴⁰⁾

38) “호남은 민주당이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했다. 민주당 경선 때 호남 출신 대선 노무현을 지지했다. 영남은 이회창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이라 한다(『조선일보』, 2002년 12월 24일).

39) 『중앙일보』(2002년 12월 20일).

40) “이규태코너”(『조선일보』, 2002년 12월 21일).

Ⅳ. 결론과 시사점

13대 대선에서부터 16대 대선까지 4대 대선은 한결같이 지역정서가 승패를 갈랐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지역갈등으로 비화했던 지역정서의 핵심은 영·호남 갈등이었다. 국토중간을 남북 축을 삼아 동서로 갈라졌던 것이다. 이는 경향면분석을 통해 확인된 득표율의 국토분포가 그걸 잘 보여준다.

득표율의 국토 동서 양분은 7대 대선 때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사이에서 처음 나타난데 이어 13대 대선 이래 16대 대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그림 5 참조). 13대 대선 때 노태우·김영삼 후보 대 김대중 후보, 14대 대선 때 김영삼 후보 대 김대중 후보, 15대 대선 때 김대중 후보 대 이회창 후보의 지지가 동서로 양분되었고, 가장 최근인 16대 대선 또한 '서(西)무현동(東)회창', '동이서노(東李西盧)'라 이름하는 것이 가장 명쾌할 정도로 국토중간을 긋는 남북 축에서 서쪽은 당선자 노무현 지지지역, 그 동쪽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 지역으로 양분되었다.

영·호남 갈등구도에서 국토 중앙에 자리잡은 충청권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고 있



제7대 대통령선거, 1971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

그림 5. 유권자 지지성향의 동서양분: ■ 당선자 우세지역

음도 주목할만하다. 15대 대선때는 이른바 DJP 연합으로 당선자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16대 대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당근을 제시받아 역시 당선자를 만들어 주었다.

지역갈등의 ‘태풍의 눈’은 영·호남 갈등이다. 갈등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노릇인데, 해당 지역주민 그리고 타 지역에 옮겨 살고 있는 이른바 출향인사가 주역이다. 태어난 땅에 대한 애착 또는 귀속의식이란 사람의 원초적 본성이 원죄인 점에서 인간사, 세상사는 무엇보다 인간의 생물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정치적 존재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13대 대선과 14대 대선은 영·호남에 더해서 충청권이 가세하는 등 투표인이 태생연고에 따라 지역정서를 표출했다면 15대 대선과 16대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속한 정당의 지역적 기반이 유권자들의 선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도권 연고자가 후보로 나선 경우에 특히 그러했다.

15대 대선 때 이회창, 이인제 두 후보의 경우, 충청권이 태생연고지역이지만 모두 수도권에서 주요 학력과 경력을 쌓은 이른바 ‘서울사람’이다. 수도권은 각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에 한쪽 지역을 선호해서 일거에 편향되는 정치성향을 보여주지 않는, 지역정서적으로 일종의 무색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소속정당이 속한 정치기반지역에 따라 득표의 고저가 결정되곤 했다.

16대 대선 때의 노무현 후보는 전적으로 정치기반지역에 따라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지역갈등 대치지역 한 극의 태생이면서 그 대극 지역의 정치기반에 힘입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뿌리 깊은 영호남의 갈등구조에 비추어 참으로 뜻밖이고 그만큼 극적이다. 정연(政緣)이 태생적 지역(地緣)을 압도했다는 점에서 지역갈등 해소의 한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일대 계기라 할 수 있겠지만, 경향면 분석이 보여주는 국토상의 득표율 분포를 본다면 쉽게 낙관할 수는 없다. 13대 대선 당선자의 득표율 편차가 30%이던 것이 14대 대선 때의 당선자 편차는 60%로 악화되었으며 15대 대선 및 16대 대선의 당선자 득표율의 지역간 편차는 더욱 늘어나 무려 70%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으로 비화하는 지역정서는 전적으로 반드시 타기할만한 것인가. 대한 대안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⁴¹⁾ 민주화의 역사가 일천한 이 나라에서 정치기반이 되어 줄만한 사회계층이 등장하지 않았다. 것처럼 사회계층적 분화 같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의 정통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민의 연고의식이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 전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1988년도 춘계 심포지움, 『심리학

41) 권태준, “국가주의적 발전과정”, 한국미래학회 월례회 발표, 2003년 6월 14일.

- 에서 본 지역감정』, pp. 79-102.
- 김형국(1974), “쇄신의 공간적 확산과 지역발전 —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환경논총』, 제1권 pp. 80-109.
- 김형국(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 출판부.
- 김해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한국심리학회 1988년도 춘계 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37-62.
- 송복(1988), “지역갈등의 구조적 요인 — 지역이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의 민주화』, 법문사.
- 전상인, “대선으로 읽는 한국사회, 2003”, 한국미래학회 월례회 발표, 2003.4.12일
- Chorley, R. and P. Haggett(1965), “Trend Surface Mapping in Geographical Researc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57, pp. 47-67.
- Kim, Hyung-Kook(1974),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an Inter-Urban Hierarchy and its Implicit Influence on a National Political Integration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Korea,” 『국토계획』, 제9권 제2호, pp. 91-116.
- Malmberg, Torsten(1980), *Human Territoriality*,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Rumley, Dennis(1981), “Spatial Structure Effects in Voting Behavior: Description and Explanation,”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Nr.4.